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 (5년, 중임 불가)	
국가 원수 지위의 권한	국가 대표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선전 포고권, 강화권
	헌법 수호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계엄 선포권, 사면권 등
	국가 기관 구성	헌법 재판소장·헌법 재판관, 대법원장·대법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 임명권
행정부 수반 지위의 권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행정부 조직, 국무 회의의 의장	
	행정부 지휘·감독권,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명 및 해임권	
	대통령령 발령권, 법률안 거부권	
사면권	의미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 일반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음
	일반사면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위반자 전체에 대해 사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특별사면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음

법원의 종류와 역할	
법원 종류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동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동급)
법원 조직	지방법원(동급 포함) - 고등법원(동급 포함) - 대법원
대법원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
재판 종류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 선거 재판, 군사 재판, 가사 재판, 특허 재판
재판 의의	개인 간의 분쟁 해결,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공익 실현
단심제	비상계엄하의 군사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의 선거재판
기타 업무	등기 업무, 가족 관계 등록부의 기재 사항 변경 허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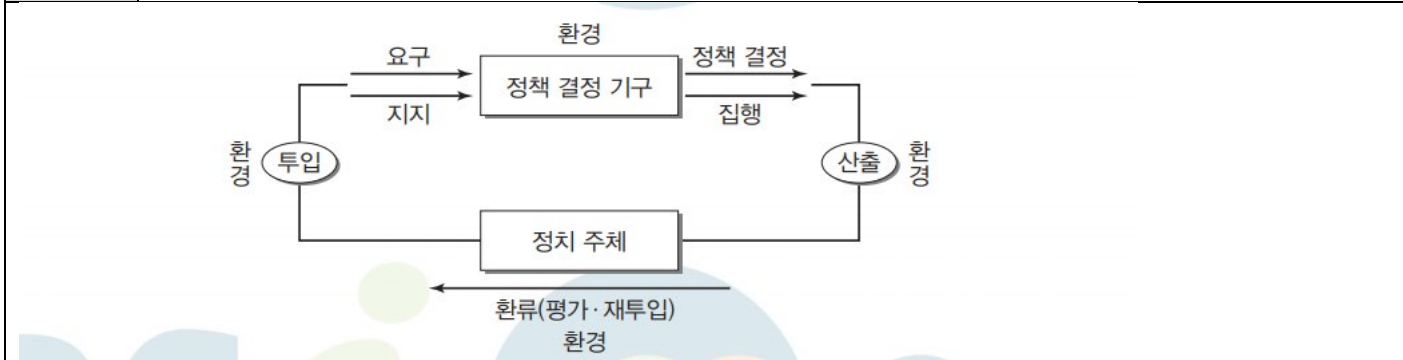
심급제도	
의미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 급이 다른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목적	하급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상급 법원에서 바로잡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서의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 항고와 재항고 :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2심과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헌법 재판소			
기능	헌법 재판을 통해 헌법 수호 및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		
위헌 법률 심판	법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제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국민	권리 구제형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는 심판
		위헌 심사형	법원에 제기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요청을 거부당한 재판 당사자의 청구로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재판
탄핵 심판	국회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판	
권한 쟁의 심판	기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	
정당 해산 심판	정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지로 해산 여부를 심판	
재판관 구성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대통령 지명 3인 총 9인, 대통령이 임명		

지방 자치의 의의		
지방 자치의 주요 원리	주민 주권 원리	주민이 대표를 선출함
	주민 자치 원리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에 참여함
	권력 분립 원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을 분리하며 자치권 보장
지방 자치의 성격	대의 민주주의	지방 의회에서 정책 결정
	민주주의의 학교	주민이 자치를 체험하며 민주주의 학습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 실현

정치 과정과 참여		
정치 과정	의미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산출되고 정치 주체의 의한 평가 및 재투입 등 환류가 이루어지는 과정
	의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며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
	요건	민주적 정당성, 시민의 참여

정치 과정의 단계	
투입	새로운 정책 요구 및 기존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시
산출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환류	산출된 정책의 수정 및 보완, 국민의 새로운 요구 투입



정치 참여		
영향을 주는 요소	정치적 효능감	정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치 체계가 참여에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감의 뜻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시민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짐
위협요소	구성원의 관계	공통의 목표 공유, 높은 신뢰 수준, 수평적 관계 → 정치 참여 증가
의의	정치적 무관심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거부, 무관심한 태도, 정치 불신·혐오
유형	공익을 반영한 정책 결정, 정책에 대한 정당성 부여, 안정적인 정책 집행, 독재 정치 차단	선거 참여, 독자 투고, 집회 및 시위 참여, 정당 가입, SNS 활동 등

선거	
의미	대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게 하고 한나라의 민주성을 측정하는 제도
기능	대표 선출, 권력의 정당성 부여, 권력 통제 및 책임 정치 실현, 유권자 교육
선거 원칙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 자유선거

선거 제도		
소 선거구제	의미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특징	주요 정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양당제를 촉진함
	장점	후보자 파악 용이, 주요 정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정국 안정에 기여
	단점	군소 정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 과대표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 사표가 많음
중·대 선거구제	의미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특징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으며 다당제를 촉진함
	장점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 사표가 적음
	단점	후보자 파악이 어려움, 군소 정당이 난립하며 정국이 불안정해짐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	
특징	대부분의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 실시,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중선거구·다수 대표제
	국회의원, 광역 의회 의원,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병행
공정선거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선거 관리 위원회 설치
문제점	지역주의가 심함, 군소 정당의 후보는 당선되기 어려움, 흑색선전 및 금권 선거
개선 방향	권역 별 비례대표제 실시, 비례 대표 의석수 확대, 선관위의 역할 강화

국민 참여 재판	
의미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형사 재판 제도
대상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형사 사건
재판 절차	배심원 선정 → 공판 → 평의 및 판결 → 판결 선고
배심원의 업무	피고인의 관한 평의를 진행하여 유·무죄 여부의 평결을 내리고 유죄일 경우 적절한 형을 토의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이므로 판사는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으나 사유를 판결문에 기재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칙	
진술 거부권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형사 재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미란다 원칙	수사 기관과 법원이 각각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지며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 변호인 제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거나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수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영장 제도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고 현행범이거나 긴급 체포 시 영장 없이 체포 가능함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함
구속 적부 심사 제도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자신의 석방을 요청 가능함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보석 제도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
증거 재판 주의	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②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음
상소 제도	피고인의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재심 제도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다시 재판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		
형사 절차에 참여할 권리	형사 피해자는 수사 진행 상황과 판결 내용을 제공받고 재판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들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함	
배상 명령 제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함	
형사 보상 제도	의미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금된 경우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요건	①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②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상	③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예 회복 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회복하도록 함	
	무죄 판결이 확정된 당사자가 청구하면 해당 사건의 재판서를 1년 동안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사회법의 발달과 노동법의 등장		
사회법의 발달	등장 배경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며 등장
	사회법의 특징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제를 하므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
	사회법의 종류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환경법 등
노동법의 의미와 종류	노동법의 의미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노동법의 종류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최저 임금법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의 보장		
근로권	근로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이 근로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노동 삼권의 보장	단결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나 단결체를 조직·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
	단체 교섭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 측과 단체 교섭을 할 권리
	단체 행동권	근로자가 쟁의 행위를 할 권리

근로 계약과 근로 기준법		
근로 계약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 기준법	①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을 근로 계약서에 명시	
	② 근로기준법의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음	
	③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임금	①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
		②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함
		③ 임금은 상여금도 포함
		④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나 근로 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에 소 제기 가능
근로 시간	①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 불가	
휴게 시간	②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연장 근로 가능	
휴게 시간	근로 시간이 4시간 당 30분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청소년의 근로 보호		
근거 법률	근로 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 보호	취업 연령 제한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으나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경우 취업 가능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려면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
	근로 사용 금지	① 미성년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② 연소자와 여성근로자는 탄광 등 위험한 근무 불가
	근로 시간 제한	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② 합의에 의한 연장 근로도 1일 1시간, 1주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지방 노동청의 허가 시 연소자와 여성근로자는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가 가능
		④ 임신부는 야간 근로가 불가능하나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가능함
근로 계약과 임금	①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본인이 직접 체결	
	② 미성년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 제도의 적용을 받음	
	③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부당 해고의 의미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 해고	요건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 대상자를 선정
	절차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최소 30일 전에 예고
부당 노동행위 (황견계약)	의미	사용자가 노동삼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	①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조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노동조합 가입 또는 탈퇴를 조건으로 고용하거나 특정 노동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조건으로 고용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구제 절차	①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② 지방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기각 결정 불복 시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
		③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불복 시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 제기
	기타 사항	① 부당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② 부당 노동 행위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 가능
		③ 부당 해고의 경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임금 체불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 소송, 사용자 형사 처벌	